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일 시 | 2026년 8월 31일 (월) 15시~17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오기형 | 국회의원 배준영 | 기획예산처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CONTENTS



1. 행사개요 ····· 1

2. 인사말씀

- 민주당 오기형 의원 인사말씀 ····· 5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인사말씀 ····· 7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인사말씀 ····· 10

3. 주제발표

-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 ····· 15
- 자발적탄소시장법 제정의 필요성 ····· 23
- 글로벌 자발적탄소시장 현황 및 국내도입의 기대효과 ····· 33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일시 | 2026년 8월 31일 (월) 15시 ~ 17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좌장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발표1.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방향 (기획예산처)

발표2.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의 필요성 (법무법인 린)

발표3.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주요 과제 (한국은행)

토론

인소영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나시영 카본에너지 대표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

주최 | 국회의원 오기형 · 국회의원 배준영 · 기획예산처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인사말씀



1 민주당 오기형 의원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 의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하한인 53%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약 3.9억톤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2024년 기간 중 감축량은 9,100만톤에 불과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탄소감축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기후금융 활성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시장의 유인이 필요합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성과를 투명하게 인증받아 크레딧 형태로 자유롭게 거래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기후금융 생태계 완성의 핵심적인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4월 발표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소시장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입법적 뒷받침과 세밀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주요국들은 이미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탄소감축 투자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이며,
초기 주도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배준영 의원님과
기획예산처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입니다.

먼저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기획예산처와 오기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환경의 문제를 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되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탄소정보를 요구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탄소 대응 역량은 우리 기업의 수출과 생존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과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녹색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줄이고,
그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다면
탄소감축은 비용을 넘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6일,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과 투명한 거래질서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와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대기업은 전문인력과 자본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탄소배출을 측정하고 감축실적을 인증받는 것부터
적지 않은 비용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탄소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벽이 아니라,
기술과 경쟁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정보기술, 금융·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탄소감축 기술은 물론,
측정·검증, 금융과 거래에 이르기까지
자발적 탄소시장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정부의 구호나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혁신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대신하기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도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얹는 규제법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과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탄소감축과 경제성장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과 시장을 통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녹색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장에는 신뢰를 더하는 법안으로 다듬겠습니다.

국회도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자발적 탄소시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3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 차관 조용범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기형 의원님과 배준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두 분께서 여야를 넘어 뜻을 모아 주셨다는 점에서
오늘 자리가 더욱 뜻깊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의 문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유래없는 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국내 거제·통영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경남 양산에서는 사상 최고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무더위는 이제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불씨도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터전,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현실인 것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시도와 과감한 전환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 감축을 이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 감축의 노력을
시장가치로 전환하는 통로입니다.
기업의 감축기술 투자, 지역사회의 산림 보호,
혁신기업의 탄소제거 노력이 투명하게 측정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면 탄소감축은 비용을 넘어
투자와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의 넷제로 이행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규제 등으로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탄소시장을 COP31(콥31)의 핵심의제로 예고했습니다.
우리 역시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탄탄한 법적 기반입니다.
자발적 감축실적의 법적 불확실성과
신뢰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문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패는 무엇보다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법은 그 신뢰를 떠받치는 주춧돌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통해
그린워싱(Green-washing)은 확실하게 걸러내고
진짜 감축에는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발적 탄소시장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산업의 한 축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 시장의 초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 직접구매와 탄소제거 크레딧 육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약 90만톤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 최대 20만톤의 탄소 크레딧 직접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안이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제정되어
정부 정책과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자발적 탄소시장법」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우리 세대의 책무이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입법 방향에 대한
밀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이 신뢰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주제발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01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

기획예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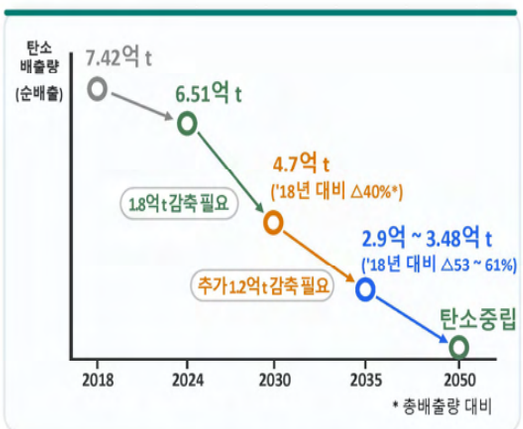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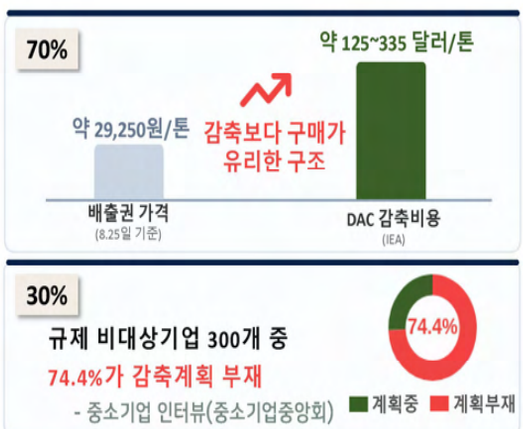

탄소감축, 부담이 아닌 기회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
2026. 8. 31.
기획예산처


발표순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방향
01. 추진 배경
02. 추진 방향
i. [법]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ii. [시장] 거래소 개설
iii. [수요/공급] 수요 지속 발굴 및 공급 지원
03. 추진 체계

01. 추진 배경

NDC 목표 달성 +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추가적인 감축기제 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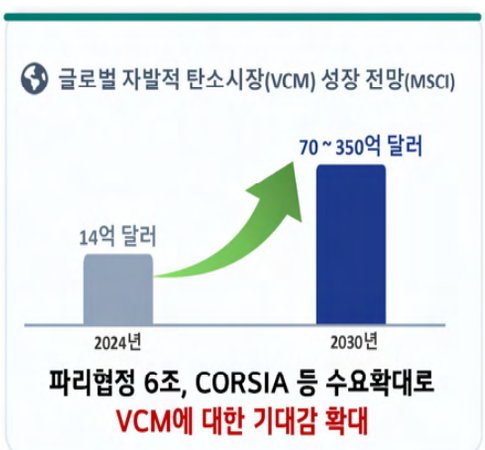




⇒ 기업의 감축 노력이 영업이익으로 직접 이어지는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시스템 구축**

01. 추진 배경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의 가파른 성장 전망, 주요국은 이미 적극 육성중



파리협정 6조, CORSIA 등 수요확대로
VCM에 대한 기대감 확대

Singapore (싱가포르)

- 거래소-국부펀드(테마섹) 합작 자발적 탄소시장(CIX) 설립
- 탄소시장 금융지원 이니셔티브 발표

United Kingdom (영국)

- 탄소시장 선도국 지위 강화를 위한 전략 발표

01. 추진 배경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은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비활성화 상태

"법적 근거 미비"

자발적 감축실적의 법적 지위 불확실
국가 탄소크레딧 관리체계 미확립

"수요 부족"

지속가능성 공시 연기
시장 후발주자로서 입지 부족

"분절적 존재"

발급 주체↔거래 플랫폼
유기적 연계 X

⇒「자발적 탄소시장법」제정 을 통해 시장 활력 및 예측 가능성 제고

02. 추진 방향

i.「자발적 탄소시장법」제정 방향

감축실적 발행부터 소각까지 이어지는 신뢰받는 관리체계 규정

기관 간 연계 및 감축실적 유통 구조



1. 발행
- 감축사업자가 **등록기관**을 통해 감축실적 승인·인증·발행
- 등록부 구축 필수

2. 평가
- **평가기관**이 무결성 원칙에 따라 품질 검증
- 평가원칙 제시, 평가지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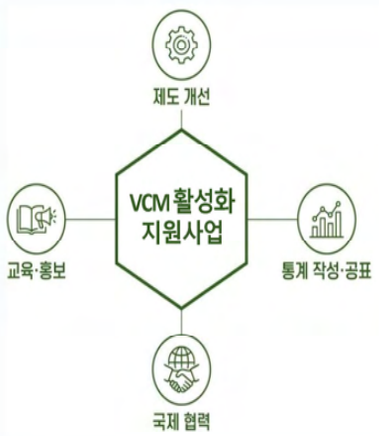
3. 유통
- **거래소**를 개설해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 담보
- 개인 참여 제한, 부정거래 제재

4. 소각
- 수요자가 감축실적 소각시 **등록기관에 정보 통지** 의무
- 거래소는 해당 감축실적 상장폐지

02. 추진 방향

i.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활성화 지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중앙, 지방,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 제도적 기반 구축 + 지원 근거 마련으로
시장 육성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전달

02. 추진 방향

ii.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개설

한국거래소에 시장 개설 및 감축실적 상장 + 해외 기관 연계를 통한 공신력 제고

1. 시장 개설 및 협력

한국거래소(KRX)에 거래시장 개설

- '26년 말 시장 개설
- 감축실적에 대한 품질 평가 후 상장여부를 결정

2. 인프라 및 상장

통합 인프라 및 표준화

- 실시간 데이터 연계
- 품질에 따른 상품군별 표준화 → 수요자 접근성 제고

3. 글로벌 연계·협업

해외 수요 및 인증 연계

- 해외수요자의국내감축실적구매허용
- 해외에서발행된감축실적 국내상장
- 글로벌 평가기관 협업 → 신뢰성 제고

02. 추진 방향

iii. 감축실적 수요 지속 발굴 및 공급 지원

탄소크레딧 활용성 확대 + 감축 실적 발급 지원 등 초기 시장 조성

탄소 크레딧 수요기반 확충

- 민관합동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발족 및 운영
-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자발적 감축 노력 반영 추진

ETS, CORSIA, ESG 공시에 통용되도록 고도화

중소기업의 감축을 지원해 시장 진입장벽 완화

- 중소기업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 지원
-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및 감축 컨설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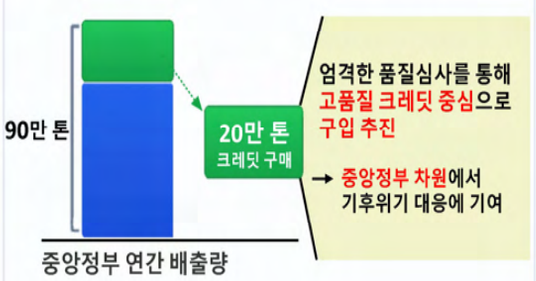
EPC, 전환금융 등 감축실적 자금 조성 메커니즘 지속 발굴

02. 추진 방향

iii. 감축실적 수요 지속 발굴 및 공급 지원

탄소 크레딧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 크레딧 직접 구매 등 추진

고품질 탄소크레딧 정부구매



탄소제거 생태계 육성 프로젝트

탄소제거 크레딧 구매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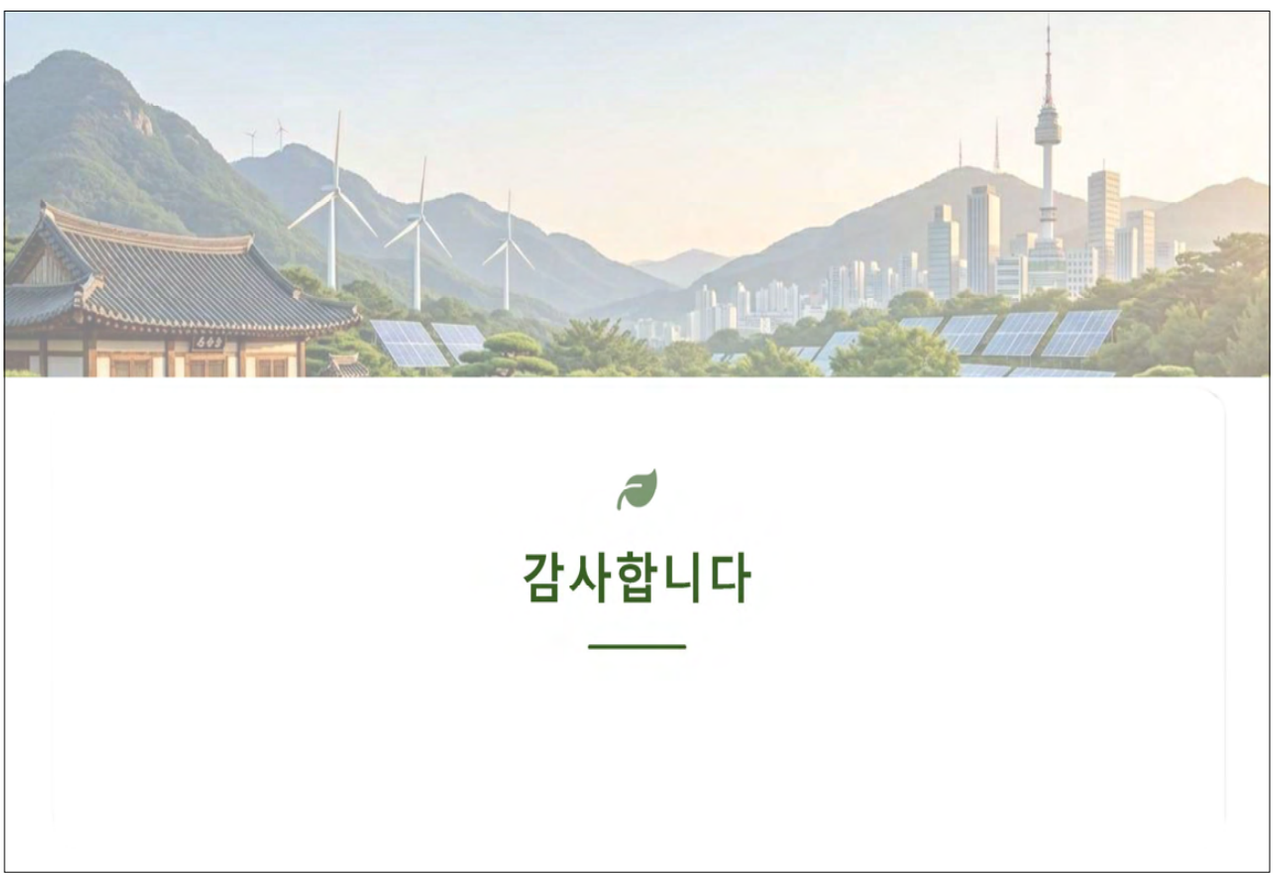
↓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초기 상금 지급

↓

국내외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취득시 선구매 계약 체결


03. 추진 체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의 조건 ⇒ 국회 · 정부 · 기업 · 학계 · 시장참여자 One-Team
국회
•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정부
• 안정적 시장관리
• 초기 수요 창출
기업
• 적극적 감축 투자
• 자금 조성 매커니즘 발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시장 참여자
• 시장 신뢰 형성
학계·전문가
• 제도개선 조언
• 감축 방법론 발굴


감사합니다

02

자발적탄소시장법 제정의 필요성

법무법인(유한) 린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 세션 I 주제발표 ②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의 필요성

2026. 8. 31. (월)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정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 4. 27.)의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메시지 자발적 탄소시장은 이미 존재하지만, 크레딧의 법정 정의·귀속·이전효력과 무결성 기준·시장질서를 아우르는 VCM 특화 통합 규율체계가 미비하다. **발행–평가–유통–소각 전 주기를 일관된 법적 체계로 정비해 신뢰·권리·집행의 기반을 세울 때 수요·투자와 국제 연계(제도별 적격성 확보)의 여건이 개선된**다.

강민구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린 LIN LLC

PROFILE

발표자 소개 : 강민구

소 개	주요 업무분야는 금융·자본시장·신산업(에너지·핀테크·모빌리티)·행정규제(GR).
학 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석사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서울대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
경 력	현) 법무법인(유한) 린 파트너 변호사 ·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평가감사 자문위원 현)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K-기업거버넌스 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회의원실 비서관 (기재위/국책금융기관 담당 등)
주요 업무사례	한국환경공단 —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 감독체계 마련 연구 (2026) ·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법령 정비 (2026) 발전사업자 — 태양광 발전사업 PF 대출약정 자문 (2026) · 기술보증기금법 개정 검토 (2025) 국회 정책토론회 발제 — 「K-GX 시대,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나아갈 길」 (2026. 7.)

CONTENTS

목 차

01	논의의 출발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개념·역할, 그리고 '왜 지금인가'
02	정부 정책방향	기획예산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 4. 27.)과 입법 취지
03	왜 '법률'인가	자율규범의 한계와 현행 VCM 규율의 5대 공백
04	입법의 방향	발행·평가·유통·소각 전 주기 규율과 재정지원·감독·집행의 근거
05	입법 추진 과제	부처 간 역할분담·ETS 연계·국제 정합성·시행 준비
06	결론	신뢰·법적 안정성·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시장을 만드는 법'

01 논의의 출발

자발적 탄소시장(VCM) —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추가 감축 동력'

개념과 작동 구조

- 기업·단체·지자체 등이 **법적 감축의무와 별개로** 감축사업(회피·제거·흡수)을 수행하고, 검증·인증을 거쳐 발행된 감축실적(탄소크레딧)을 **거래·소각**하는 시장
- 수요: 기업의 넷제로 이행·잔여배출 상쇄, CORSIA 적격크레딧 수요('27~'35 제2단계 원칙적 의무·일부 면제), ESG 공시·공급망 요구 / 공급: 기후테크·카본테크, 산림·농업·자원순환 사업자
- 가치의 원천은 **'신뢰'** — 추가성·영구성·이중계산 방지·투명성 등 무결성(integrity)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규제시장(ETS) vs 자발적 시장(VCM)

근거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VCM 전용 통합법 없음 — 민간 표준·개별 제도
대상	(대표 기준) 최근 3년 연평균 12.5만톤 이상 업체·2.5만톤 이상 사업장 (국가 배출 약 71%)	비규제 부문(약 30%) 감축사업자·중소기업 / 국내외 수요자
거래 대상	할당배출권(KAU)·상쇄배출권(KCU)	자발적 감축실적(탄소크레딧)
인프라	KRX 배출권시장·법정 등록부	발급주체별 분절·통합 거래소 부재

약 71%

ETS가 포괄하는 국가 온실가스 비중(기획예산처, 2026. 4. 27.) — 비규제 부문(약 30%)의 감축 유인 부족이 정부 진단

+2.02억톤

2030 NDC 잔여 감축 필요량(2024년 잠정배출량 대비, 1996 IPCC 지침) — 총배출량 추가감축 1.27억톤(매년 3.6% 이상) + CCUS·흡수원·국제감축 등 0.75억톤

14억$ → 50~200억$

글로벌 탄소크레딧 1차시장: 2025년 → 2030년 시나리오 전망(MSCI, 2025년 가격 기준). 싱가포르(CIX)·영국 등 자국 시장 허브화 경쟁

*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및 별첨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 4. 27.) ·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2025. 8. 20.; 1996 IPCC 지침 기준 6억 3,897만톤; 잔여 2억 200만톤 = 총배출량 감축 1억 2,700만톤(매년 3.6% 이상) + 흡수·제거 7,500만톤) · MSCI Carbon Markets, "Carbon Credits Come of Age in 2025"(2026. 1., 1차시장 기준; 정부 4. 27. 자료는 이전 전망치 70~350억$ 인용) · ETS 포괄 약 71%·비규제 약 30%는 정부 자료(2026. 4. 27.) 표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반올림·산정기준 차이로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음

01 논의의 출발

왜 지금인가 — 국제 규범은 정비되는데, 국내 시장은 분절·통합규범 부재

국제: 규범과 수요의 동시 정비

- **파리협정 제6조** 잔여 핵심 운영쟁점 합의(COP29, 2024. 11.) → 제6.4조 메커니즘(PACM) 가동 기반 마련, 후속 지침 지속 정비
- **CORSIA** 국내 이행법제(「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27~'35 제2단계 원칙적 의무(일부 국가 면제), 한국은 시범단계부터 참여·상쇄의무 체계 운영
- **무결성 기준의 확산** — [민간] ICVCM CCP·VCMI Claims Code(v3.1, 2025. 8.) / [공적] EU 탄소제거·탄소농업 인증(CRCF, Reg. 2024/3012). 미국 CFTC는 VCC 파생상품 지침 철회(2025. 9., 기존 규제는 유지) — 규범 경쟁의 불확실성
- **허브화 경쟁** — 싱가포르(탄소세 과세배출량 5% 한도 국제크레딧 상쇄 + CIX), 일본(J-크레딧·GX-ETS), 영국(무결성 원칙·제도화 검토) 등 허브화 추진

국내: 시장은 있으나 '통합 규범'이 없다

- **국내 감축실적 제도 분절**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KOC, 규제시장 연계),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ARCOP, 농식품부), 산림탄소상쇄제도(산림청) 등 → 통합 거래 인프라·공통 표준 부재
- **크레딧의 법적 지위·이전 효력 불명확** → 기업 투자와 시장 형성의 불확실성 (기획예산처 진단, 2026. 5. 6.)
- **국제 활용의 제약** — 국내 인증 감축실적은 CORSIA 등 국제제도별 적격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해 활용 범위가 제한적, 카본테크 기업의 수익화 곤란
- **시장질서 규율 공백** — 그린워싱 등은 표시광고법 등 일반법이 사안별로 적용될 뿐, 이중계산·시세조종 등 VCM 고유 질서에 대한 통합 감독·제재 근거 부재

→ 선결과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발행·평가 체계 + 통합 등록부·거래소 + 시장질서 규율을 **'하나의 법률'**로 갖추는 것(개별법 개정도 대안이나 정부는 별도법 통합 정비를 추진). 이는 시장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의 문제**이며, 정부(기획예산처)의 조성 방향도 법 제정 → 거래소 개설 → 수요·공급 지원의 순서로 설계되어 있음

* 자료: 기획예산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 4. 27.) · UNFCCC COP29 결정(Art. 6.2/6.4) 및 후속 CMA 지침 · ICVCM CCP(2023 도입·이후 개정) · VCMI Claims Code of Practice v3.1(2025. 8.) · Regulation (EU) 2024/3012 · CFTC Final Guidance on VCC Derivative Contracts(2024. 10. 15. 관보; 2025. 9. 10. 철회) · UK Principles for Voluntary Carbon and Nature Market Integrity(2024. 11. 15., COP29) · CORSIA 적격 발행기관에 국내 기관 미포함(기획예산처, 2026. 4. 27.)

02 정부 정책방향

기획예산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 4. 27.) — 4대 축

①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 발행–유통–소각 전 과정을 관리하는 **등록기관 체계** — 감축실적의 승인·인증·발행, 거래·소각의 등록에 효력 부여(정부 구상), 전 주기 등록부 구축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평가기관 제도** — 추가성·투명성·영구성 등 국제 무결성 원칙을 반영한 평가지표 공개, 거래소 상장 시 평가결과 고려
- 공정한 가격 형성·거래 안정성 확보, 소각 단계까지 연계 관리

② 거래소 개설 (연말 목표)

- **한국거래소(KRX) 내 자발적 탄소시장 신설** — 분산된 크레딧 통합 거래(KRX–Xpansiv MOU 2025. 9.)
- 통합 등록부 구축·등록기관 API 연계 → 거래·소각 실시간 반영, 평가결과에 기반한 상장 여부 결정 → 저품질 크레딧의 시장 진입 억제
- 품질기준별 **'상품군' 표준화·가격 형성**, 해외 수요자 구매 허용·해외 등록기관 크레딧 상장 검토, 해외 평가기관 협업·국내 평가기관 육성

③ 수요 발굴

- 민관합동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사무국 대한상의) — 수요·공급 연결, 현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파리협정 6조·CORSIA 동향 모니터링
- 2027년 예산안에 활성화 과제 적극 발굴
- 중장기: 고품질 감축실적의 **배출권시장·지속가능성 공시 연계 가능성 검토**

④ 공급 지원

- 중소기업 감축 지원(설비 전환·MRV·융자·보증) 등 시장 진입 장벽 완화
- **감축실적 선발행·선보상,** 전환금융 등 감축실적 기반 자금조달 메커니즘 발굴

기획예산처 장관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 …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 아울러 우리 시장이 **아시아 탄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2026. 4. 27. 대한상의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회사·보도자료)

* 이하 정부의 2026. 4. 27. 제도구상·입법 추진방향이며 현행 법률이 아님.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및 별첨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 4. 27.)

02 정부 정책방향

정부가 밝힌 입법 취지 — '법적 지위' 부여와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기획예산처가 밝힌 법제화의 이유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장 발언 요지 및 최신 NDC 수치 반영 —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전략 포럼」(국회도서관, 2026. 5. 6.; 언론보도 기준)

- 현재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크레딧은 **법적 지위가 없어** 기업의 시장 참여·투자 불확실성이 큼 → 법 제정으로 국내 거래 크레딧에 **법적 지위 부여**
- 배출권거래제는 법 체계가 있어 세제·정책 지원이 가능하지만, VCM은 **제도적 기반이 부족** → 시장 지속가능성·수익화의 불확실성
- 발행·평가·검증·유통·소각 **전 과정을 제도화**하는 「자발적 탄소시장법」을 추진 → 정책 불확실성 축소, 시장 육성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 [최신 수치 보정] 2030 NDC 잔여 감축 필요량 2.02억톤(흡수·제거 0.75억톤 포함)·감축비용 급증 →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한계, **규제 사각지대 감축**의 동력 필요

추진 경과 — 정부·유관기관

2025. 9. 16.	KRX–Xpansiv(글로벌 탄소크레딧 거래플랫폼 CBL 운영사) 업무협약 * 현지시각 기준(정부 자료 '25. 9. 17.)
2025. 12. 24.	기획재정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확정 (경제관계장관회의 — 해외 자발적 감축실적 기반 다자체계, 2027년 시범사업)
2026. 1. 2.	정부조직 개편 — 기획재정부 → 기획예산처(탄소중립정책과 소관)·재정경제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25. 10. 1.) 체제
2026. 4. 27.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 발표 · 얼라이언스 출범
2026. 5. 6.	「자발적 탄소시장법」 입법 취지·세부 추진방향 구체화(전 과정 제도화)
2026. 8. 31.	본 토론회 → 정기국회 발의 심사 과제 논의, 연말 KRX 시장 개설과 병행

→ 정부 진단의 핵심 신뢰(무결성) · 법적 지위 · 정책 예측가능성. 법률은 시장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 — 등록기관·평가기관·거래소의 3자 구조를 하나의 법적 인프라 위에 통합하는 것이 정부 제도구상의 골자. 다만 기존 감축실적 제도·중소기업 지원제도와의 관계 정리가 남은 입법 과제

* 자료: 기획예산처 발표 및 언론보도(2026. 5. 6.) · 기획재정부 「GVCM 로드맵」(경제관계장관회의, 2025. 12. 24.)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26. 4. 27.; KRX–Xpansiv MOU 기재) · 2030 NDC 추가 감축 필요량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2025. 8. 20.; 1996 IPCC 지침) 기준 2억 200만톤(총배출량 감축 1억 2,700만톤 + 흡수·제거 7,500만톤)으로 통일 인용 — 발언 요지 중 감축 필요량은 발언 당시 인용치가 아니라 최신 잠정배출량 기준으로 보정한 값

03 왜 '법률'인가

자율규범(민간표준·가이드라인)만으로는 신뢰·권리·집행력을 법적 효력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신뢰 — 무결성 기준의 통일

발행·검증·인증·평가가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법정 절차와 공개(등록부·평가지표)로 담보 → 국내 실적의 신뢰도와 국제 상호운용 가능성 제고

권리 — 크레딧의 법적 지위

감축실적의 정의·발행·이전 효력·소각을 법률로 확정 → 거래·투자 및 회계·담보 판단의 예측가능성 제고, 분쟁 예방

집행 — 시장질서와 제재

과징금·형벌·강제검사·업무정지 등 공권력적 제재·감독은 법률유보 사항 → 자율규범으로 대체 불가

정부 진단도 같은 방향 "크레딧은 법적 지위가 없어" 기업의 시장 참여·투자 불확실성이 크고, VCM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시장 지속가능성·수익화가 불확실하다는 취지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장 발언, 2026. 5. 6.)

그래서 — **「자발적 탄소시장법」은 단순한 '규제법'이 아니라 신뢰·권리·집행이라는 시장의 3대 기반을 세우는 '시장 인프라 창설법'**. 배출권거래제(할당·법정 등록부·KRX 시장)가 법률로 시장의 기반을 놓았듯, 자발적 시장도 법률로 신뢰의 기초를 놓을 때 수요와 투자의 여건이 개선된다.

03 왜 '법률'인가

현행 VCM 규율의 5대 공백 — 시행령·지침·민간표준으로 메우기 어려운 '법률사항'

공백	현행 문제	왜 '법률'이어야 하는가
① 법적 지위	법률상 정의와 이전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중매매·분쟁·회계처리·담보활용에 불확실 — 투자 유인 저해	**권리의 명확화 — 크레딧의 성격·귀속·이전과 등록의 효력발생 요건·제3자 관계를 법률로 확정** · **거래 안전** — 이중매매를 막는 공적 등록·공시 제도 마련 · **회계·과세** — 자산 인식·투자 판단의 법적 기초와 예측가능성
② 발행 체계	발급주체별 분절·상이한 표준, 통일된 검증·인증 절차의 법적 근거 부재 → 국제 상호운용·적격성 확보에 제약	**표준의 통일** — 복수 발급주체에 공통 법정 요건·등록규칙 적용 · **공적 신뢰** — 승인·검증·인증의 법적 체계화 → 국제적 상호운용성 제고(적격성은 제도별 판단) · **역량 연계** — 기존 검증 인프라 활용의 근거 · **진입 규율** — 등록기관의 자격·책임 부과
③ 품질(무결성)	VCM 전반에 공통 적용되는 추가성·영구성·이중계산 검증 장치 부재, 저품질 크레딧·그린워싱 우려 → 시장 신뢰 훼손	**평가의 독립성** — 이해상충 방지 등 의무 부과는 법률사항 · **그린워싱 억제 — 무결성 원칙의 법정화로 등록·상장·감독의 공통기준 확보** · **이중계산 방지** — ETS·기존 상쇄제도와의 경계 설정 · **정보 공개** — 평가지표 공개 의무
④ 유통 질서	통합 거래 인프라 부재, 시세조종·부정거래·허위표시에 대한 VCM 고유 규율 공백, 소각(retirement) 확인 곤란	**시장 개설** — 거래소에 법정 지정·승인 지위와 공법상 감독권을 부여하려면 법률의 수권 필요 · **불공정거래 규제** — 시세조종 금지·손해배상 특칙은 대표적 법률사항 · **공시 기준** — 권리변동의 단일 기준 확정 · **사용 확정** — 소각·거래중단의 효력
⑤ 감독·제재·지원	감독·검사 근거, 제재 수단, 재정지원·지원조직에 관한 개별·직접적 근거 미비 → 정책 추진력·집행력 한계	**재정지원 근거** — 지속적 지원사업·전담조직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확보 · **감독·검사** — 침익적 행정작용으로 법률유보 · **제재** — 과징금·벌칙은 헌법상 법률사항 · **부처 협업** — 협력체계의 법정화 · **정책 지속성** — 단년도 예산주기를 넘어서는 제도 안정성

→ **결론** 5대 영역에는 권리·의무·재정·제재 등 법률 수준의 정비가 필요한 핵심사항이 다수 포함. 개별법 개정도 입법대안이나, 법정 등록효력·시장감독·제재와 전 주기 규율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별도법 방식을 추진(기획예산처, 2026. 4. 27.)

04 입법의 방향

입법이 담아야 할 규율 — 발행·평가·유통·소각 전 주기를 하나의 법적 인프라로

감축실적의 생애주기 — 단계마다 법률이 정해야 할 사항

① 사업계획 승인	② 검증	③ 인증·발행	④ 평가	⑤ 거래	⑥ 소각
등록기관 심의·승인·등록·공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MRV·검증 절차	적합성 확인 → 감축실적 발행·등록	평가기관 무결성 평가·지표 공개	거래소·장외 거래 → 통합 등록부에 실시간 반영	등록기관 통지 → 등록부 반영 → 거래중단
표준·절차	MRV 신뢰	발생·귀속 명확화	무결성 평가	이전 효력	중복사용 방지

등록기관 (인증·등록부)	검증기관 (MRV 인프라)	평가기관 (무결성 평가·지표 공개)	거래소 (KRX·상장심사)	수요자 (소각·claim 주체)	주무부처 (정부 구상: 기획예산처)

시장의 기본원칙
자발적 감축실적의 정의 · 무결성 원칙 · 평가의 독립성 등 시장 전반의 기준

발행 체계
등록기관의 지위·감독 · 사업 승인–검증–인증–등록으로 이어지는 공통 발행 절차

품질 평가
독립 평가기관의 무결성 평가와 평가지표 공개 → 저품질 크레딧·그린워싱 억제

유통 인프라
거래소 개설·운영 기준 · 권리 이전 효력의 공통 기준 · 장외거래의 투명성

소각과 사용
소각 정보의 공시·상쇄 주장(claim) 기준 → 신뢰성 확보(자체 감축 보완 원칙은 발표자 제안)

활성화·재정지원
정부 활성화 사업·지원조직과 예산 지원의 근거 · 수요 발굴과 공급 기반 확충

감독 체계
시장 참여자·등록기관·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계기관 협력

질서 유지·시행 준비
불공정거래 규율과 제재 · 충분한 준비기간과 기존 발급주체의 전환

* 기획예산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 4. 27.)에서 발표된 등록기관·평가기관·거래소 3자 구조와 통합 등록부 구상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에 담길 구체적 조문은 향후 입법예고 단계에서 확정됨

04 입법의 방향

재정지원·감독·집행 — 지속적 지원체계와 강제적 감독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재정지원의 근거

- 정부 활성화 사업 — 발표된 **수요 발굴·공급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법적 근거** 확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부처 간 역할 분담의 제도적 틀
- **전담 지원조직·예산 지원**의 근거 — 정책을 이어갈 집행 체계
- → 수요 발굴(얼라이언스·'27년 예산)·공급 지원(중소기업 MRV·융자·보증)의 예산사업은 법률상 근거를 둘 때 지속성·전담체계·집행근거가 명확해짐

감독 체계

- 시장 참여자·등록기관·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자료제출·보고, **검사**
-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마련** — 축적된 시장감독 역량의 활용
- 부실 운영 시 시정·업무정지에 더해 등록기관 퇴출조치·거래소 지정취소 등 시장 퇴출 장치
- → 강제적 자료제출명령·검사·업무정지 등 공권력적 감독권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

집행력(제재)

- **과징금** — 부당이득 환수형 제재 도입 검토, 불공정거래의 경제적 유인 제거
- **형사벌** — 중대한 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형사제재 도입 검토 — 시장 신뢰의 최후 담보
- **과태료** — 통지·등록·보고 등 시장 인프라 의무의 실효성 확보

→ 법 제정은 정책 실행력의 핵심 기반 정부가 발표한 조성 방향(수요 발굴 · 공급 지원 · 거래소 개설)은 **법률상 근거가 갖춰질 때 예산·조직·감독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과징금·형벌·강제검사·업무정지 등 공적 제재·감독은 자율규범으로 대체**할 수 없다 — **시장 개설 일정과의 정합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요구되는 이유

* 정부의 수요 발굴·공급 지원·거래소 개설 계획은 기획예산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 4. 27.). 침익적 행정작용과 제재의 법률유보는 헌법 제37조 제2항 및 행정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일반 법리

05 입법 추진 과제

성공적 제정을 위한 6가지 고려사항 — 핵심 쟁점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① 거버넌스·부처 협업

정부 구상상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ETS·탄소중립기본법), 금융당국(시장감독),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기존 상쇄제도)와의 역할 분담·협의체를 법률에 명확히 담을 필요. 중소기업 감축 지원 등 중기부 소관 정책수단과의 연계·중복 조정도 함께 정리할 과제

② ETS·기존 상쇄제도와의 관계

이중계산 방지를 위한 경계 설정이 전제.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고품질 크레딧의 배출권시장·지속가능성 공시 연계는 배출권거래제와의 정합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③ 국제 정합성·상호인정

해외 크레딧의 국내 상장과 국내 크레딧의 해외 판매(정부 검토사항)에 대비해 제6.2조 ITMO·승인된(authorized) 제6.4조 실적에는 승인·상응조정 요건을, CORSIA 사용분에는 ICAO 적격성 요건을 각각 반영하고, 미승인 감축기여분(mitigation contribution unit)은 이와 구분

④ 무결성의 사후 관리

부실·과다 발행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의 인증 취소·거래중단 등 사후 시정 수단을 함께 갖추어야 무결성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짐

⑤ 하위법령·운영규정의 설계

시장 참여자의 범위, 평가원칙, 등록기관·거래소의 요건, 제재 기준 등 위임사항이 많은 만큼 포괄위임 논란을 피하도록 법률과 하위법령의 역할 분담을 제정 단계에서 미리 설계할 필요

⑥ 시행 준비·경과조치

시행 준비기간과 연말 거래소 개설 사이의 시차 → 시범운영과 기존 발급주체(대한상의 등)와의 전환·병존·상호인정 등 경과조치. 크레딧 사용 주장(claim) 기준과 법적 성격의 정리

→ 설계의 원칙 세부 운영사항은 하위법령·운영규정·경과조치로 구체화하되 권리·의무·제재의 핵심은 법률에서 명확히 — 입법을 미룰 이유가 아니라, 정부가 택한 별도법 방식(기획예산처, 2026. 4. 27.)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할 이유

06 결론

결론 — 자발적 탄소시장법은 시장질서를 세워 시장을 '만드는' 법

1 신뢰 (무결성)

국제기준 부합 발행·검증·인증·평가 + 등록부·평가지표 공개 → 국제 신뢰도와 제도별 활용 가능성 제고

2 법적 안정성

크레딧의 정의·발행·이전 효력·소각을 법률로 확정 → 거래·투자·회계 판단의 예측가능성 제고

3 시장질서

거래소·불공정거래 규제·감독·제재 → 그린워싱·시세조종 억제, 정책 집행력 확보

결론 (발표자 견해) 정부(기획예산처)의 진단대로 자발적 탄소시장의 핵심 병목 중 하나는 '신뢰와 법적 지위의 미비'이며, 수요 기반 확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탄소시장법」은 발행–평가–유통–소각 전 주기를 하나의 법적 인프라로 통합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시장 감독에 확실한 근거**를 부여하는 법이다. 2026. 4. 27. 조성 방향과 연말 탄소크레딧시장 개설 목표에 맞춘 조속한 입법은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다.

* 자료: 기획예산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 및 보도자료(2026. 4. 27.) ·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장 발언(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전략 포럼, 2026. 5. 6.)

법무법인(유한) 린 LIN LLC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의 필요성 10/10

감사합니다

강민구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린 LIN LLC

정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탄소시장법」은 **신뢰·법적 지위·시장질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감축 노력의 수익화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감축목표 이행과 정합적인 시장 생태계를 여는 인프라입니다. (발표자 견해)

법무법인(유한) 린 LIN LLC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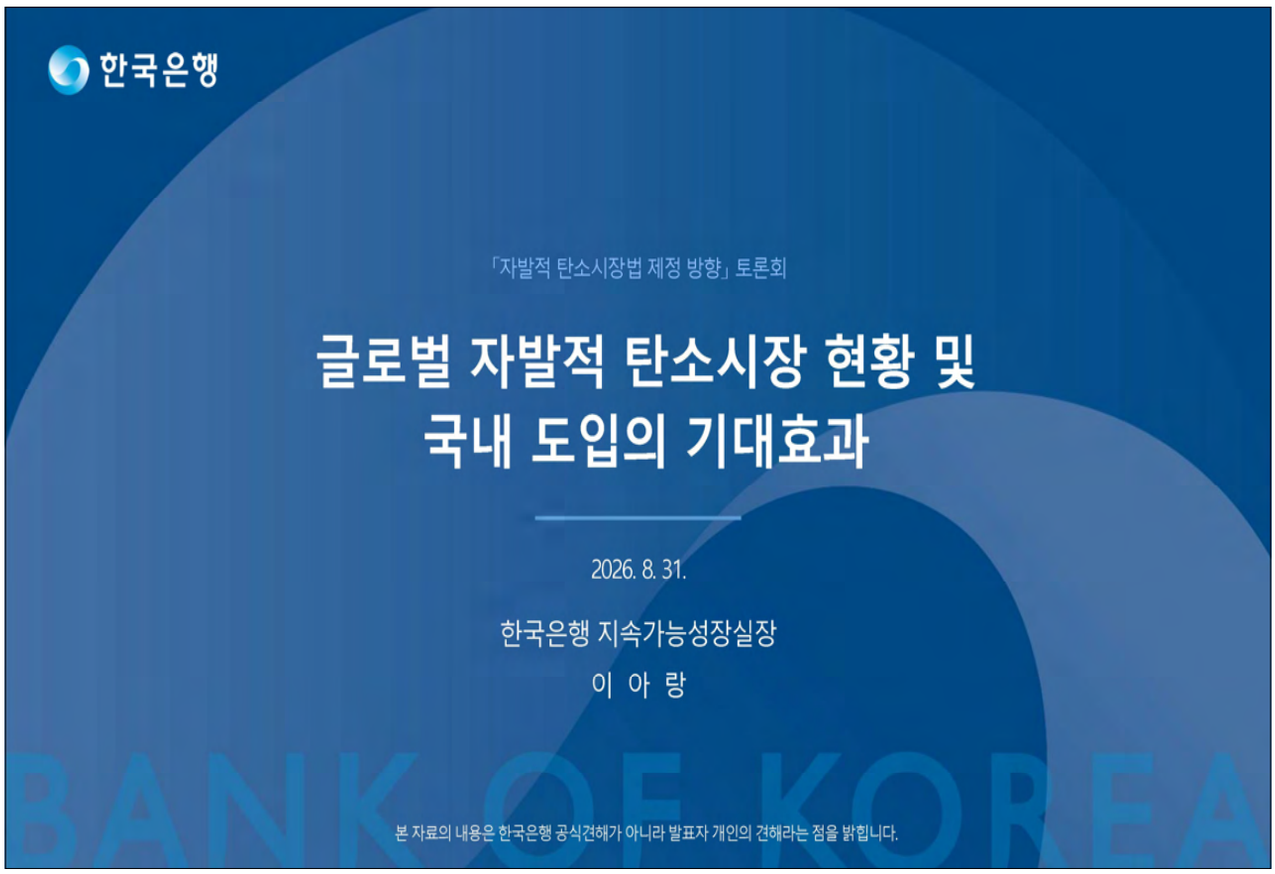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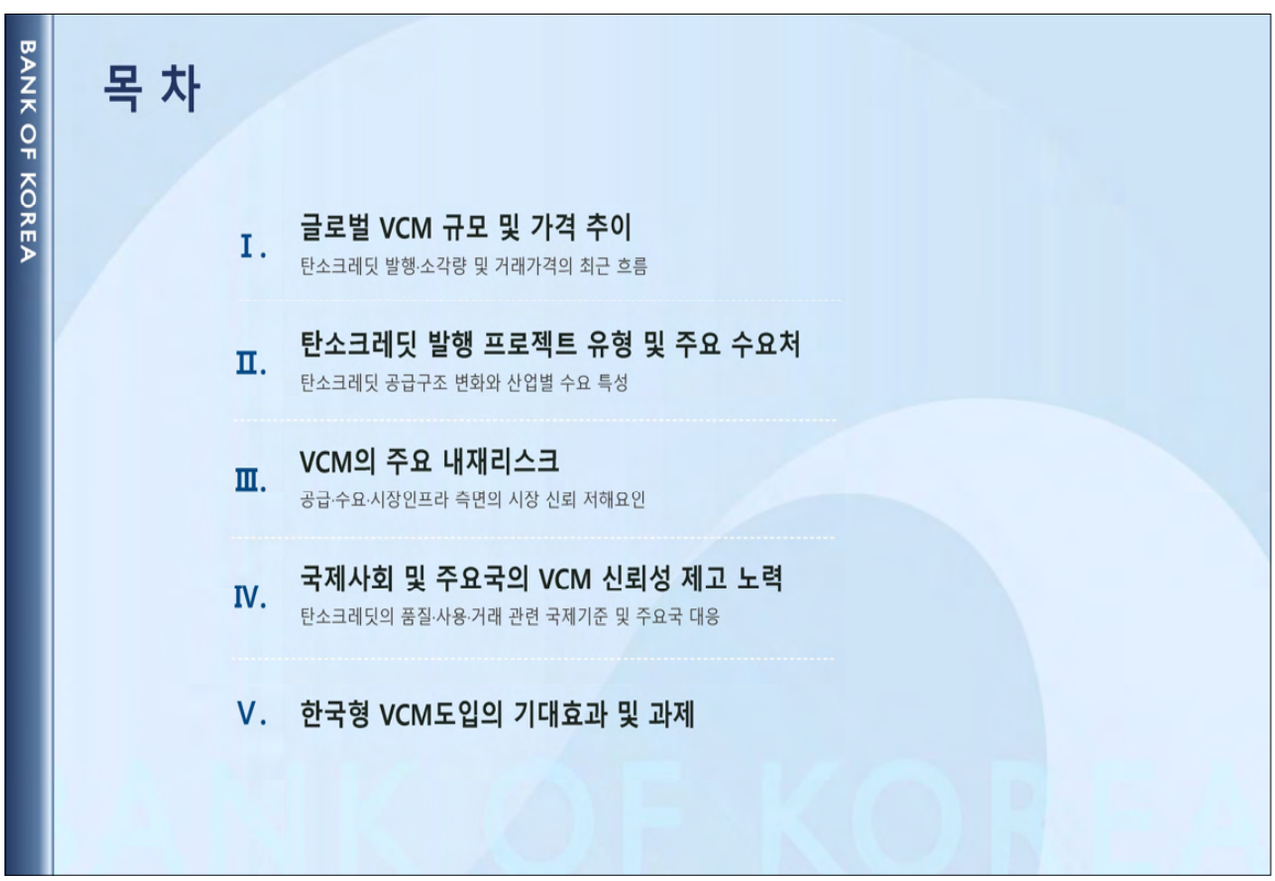
03

글로벌 자발적탄소시장 현황 및 국내도입의 기대효과

한국은행




한국은행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국내 도입의 기대효과
2026. 8. 31.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
이 아 랑
BANK OF KOREA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 공식견해가 아니라 발표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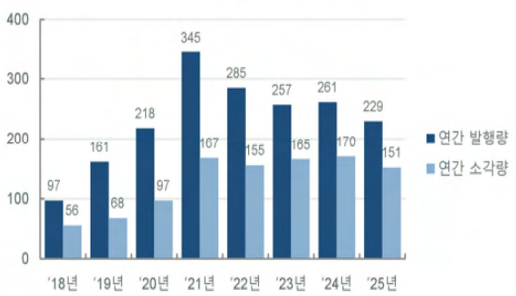

BANK OF KOREA
목 차
Ⅰ. 글로벌 VCM 규모 및 가격 추이
탄소크레딧 발행·소각량 및 거래가격의 최근 흐름
Ⅱ. 탄소크레딧 발행 프로젝트 유형 및 주요 수요처
탄소크레딧 공급구조 변화와 산업별 수요 특성
Ⅲ. VCM의 주요 내재리스크
공급·수요·시장인프라 측면의 시장 신뢰 저해요인
Ⅳ.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VCM 신뢰성 제고 노력
탄소크레딧의 품질·사용·거래 관련 국제기준 및 주요국 대응
Ⅴ. 한국형 VCM도입의 기대효과 및 과제

BANK OF KOREA

Ⅰ. 글로벌 VCM 규모 및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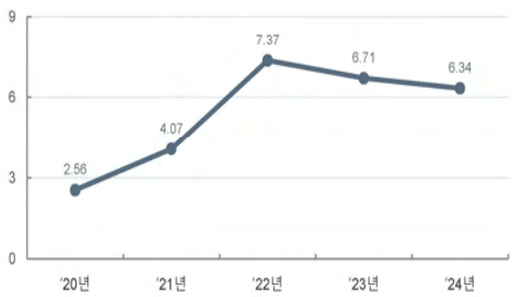
- 탄소크레딧 발행·소각량은 `21년까지 빠르게 증가한 이후, 발행량은 감소하고 소각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
- 탄소크레딧 평균거래가격은 `20~`22년 중 크게 상승한 이후 하락하여, 최근에는 정점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지속

탄소크레딧 발행·소각량 ($MtCO_2e$)



주: 발행·소각량은 4개 인증·등록기관(VCS, GS, ACR, CAR) 등재 프로젝트 합계
자료: BloombergNEF(2026)

탄소크레딧 평균거래가격 ($/tCO$_2$e)



주: Ecosystem Marketplace에 등록된 프로젝트 평균거래 가격
자료: Ecosystem Marketplace

발행량은 정점 대비 감소, 소각량은 비교적 안정

- **발행량**은 `21~`25년 중 **약 34% 감소**한 반면, **소각량**은 `22년이후 **연간 150~170MtCO2e** 수준에서 등락

▶ **신규 크레딧 공급은 축소되었으나 실제 사용 규모는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모습**

평균거래가격은 정점 이후 하락

- `22년 7.37달러에서 `24년 6.34달러로 하락하여 **정점대비 약 14%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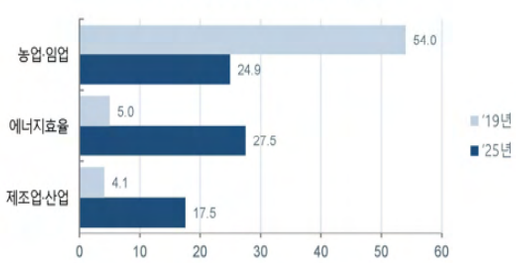
▶ **다만 탄소크레딧은 프로젝트 유형·품질 등에 따라 거래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특징**

BANK OF KOREA

Ⅱ. 탄소크레딧 발행 프로젝트 유형 및 주요 수요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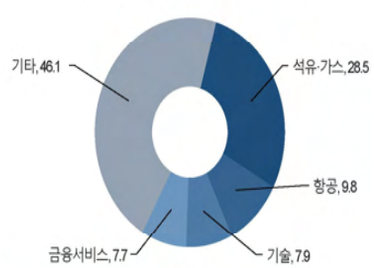
- 공급 측면에서는 측정·검증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프로젝트의 비중이 확대되고, 수요 측면에서는 감축부담과 대외 기후공약 이행 압력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

프로젝트 유형별 발행 비중 변화 (%)



주: 발행·소각량은 4개 인증·등록기관(VCS, GS, ACR, CAR) 등재 프로젝트 합계
자료: BloombergNEF(2026)

산업별 누적 소각 비중 (%, '15~'25년)



주: 발행·소각량은 4개 인증·등록기관(VCS, GS, ACR, CAR) 등재 프로젝트 합계
자료: BloombergNEF(2026)

측정·검증이 비교적 명확한 프로젝트의 발행 비중 확대

- '19~'25년 중 농업·임업의 비중은 절반 이하로 축소된 반면 (54.0% → 24.9%), 에너지효율과 제조업·산업은 크게 확대(9.1% → 45.0%)
- 농업·임업은 **감축실적 검증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반면, 에너지효율과 제조업·산업은 **측정·검증이 비교적 명확**

▶ **최근 VCM에서 감축실적의 신뢰성과 검증가능성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

석유·가스 등 일부 산업이 주요 수요처로 형성

- `15~`25년 누적 소각량의 약 54%가 석유·가스, 항공, 기술,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석유·가스가 약 29%로 가장 높은 비중
- 석유·가스, 항공 등 자체 **감축부담이 큰 산업**과 기술, 금융서비스 등 대외 **기후공약 이행 필요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

▶ **VCM 수요는 산업 전반에 고르게 형성되기보다, 각 산업의 감축여건과 기후공약 이행 필요성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

BANK OF KOREA

Ⅲ. VCM의 주요 내재리스크

- VCM은 민간 중심의 인증·검증 및 자발적 사용 구조로 인해 공급·수요·시장인프라 각 단계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

① 공급 부문

탄소감축실적의 품질·신뢰성 리스크

- **탄소크레딧이 없어도 추진되었을 사업에 크레딧이 발행**되는 경우, 실질적인 추가 감축효과가 제한될 여지
- 프로젝트별 **기준선(baseline) 설정 및 감축량 산정 방식**에 따라 감축실적이 과대·과소 평가될 수 있으며, **저장된 탄소가 다시 배출**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

▶ **실제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탄소크레딧별 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소지**

② 수요 부문

탄소크레딧 사용에 따른 그린워싱 리스크

- 기업이 자체적인 탄소배출 감축보다 **외부상쇄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실질적인 감축노력이 약화될 가능성
- 탄소크레딧 사용내역이나 감축성과에 대한 **공시·제3자 검증이 미흡**한 경우 기업의 탄소감축 주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여지

▶ **부적절한 크레딧 사용은 구매기업의 평판리스크를 높이고 자발적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소지**

③ 시장 인프라 부문

중복 사용 및 회계 정합성 리스크

- 탄소크레딧의 **발행·이전·사용·소각 이력이 정확히 추적 관리되지 않을 경우** 동일 크레딧이 중복 사용될 가능성
- 국제적으로 이전·사용되는 크레딧의 경우 **국가 NDC 등 과의 회계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 감축실적이 중복 계상될 여지

▶ **탄소크레딧 거래의 회계적 신뢰성을 낮추고 일부 국제적 거래 상쇄 용도로의 활용을 제약할 가능성**

자료: Wetterberg et al. (2024)

BANK OF KOREA

Ⅳ.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VCM 신뢰성 제고 노력

- 국제사회는 VCM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탄소크레딧의 품질, 기업의 사용·공시, 거래·등록 기준을 각각 정비하고 있으며, 주요국도 자국 여건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

국제적 기준 정비

① <품질기준>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판별하기 위한 공통기준 마련

- 추가성, 영구성, 감축량 산정의 신뢰성 등 **고품질 탄소크레딧이 갖추어야 할 핵심원칙(CCPs)을 제시**
- 탄소크레딧 발행 프로그램·방법론이 이를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기준을 충족한 크레딧에 CCP라벨을 부여**

② <사용기준> 기업의 탄소크레딧 사용 및 감축성과 공시기준 정비

- 기업이 탄소크레딧을 **어떤 조건에서 사용**하고, 탄소중립 등 **감축성과로 인정·공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
- 특히, 탄소크레딧은 기업의 직접적인 배출감축을 대체하기보다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

③ <등록·국제거래> 탄소크레딧의 발행부터 소각까지 추적할 수 있는 등록체계 구축

- 파리협정 제 6조에 따른 국제 탄소거래를 위해 **탄소감축 사업 방법론과 등록 인프라를 정비**
- 탄소크레딧의 **발행·이전·사용·소각 이력을 추적**하여 중복사용을 방지하고 **회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구분	국가	주요 내용
탄소가격제 연계	싱가포르	• 탄소세 납부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제 탄소크레딧을 **과세배출량의 최대 5%까지 활용 가능** • 탄소크레딧을 법정 탄소비용 이행에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VCM의 활용범위를 확대
거래기반 구축	일본	• 도쿄증권거래소가 **탄소크레딧 거래시장을 개설**(23년) • 공식 거래기반을 마련하여 탄소크레딧의 거래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
인증·사용 기준 정비	미국·영국	• **고품질 탄소크레딧의 요건**과 **기업의 적절한 사용 및 정보공개 기준**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
	EU	• 탄소제거·탄소농업 등에 대해 **공통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탄소제거·탄소농업 등 관련 실적의 신뢰성 제고
국가정책과 연계	인도네시아	• 국내 등록·거래체계를 운영하면서 **국가 감축목표(NDC)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정합성**을 중시
	브라질	• 자발적 탄소시장을 별도로 운영하기 보다 **국가 탄소시장·감축정책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

자료: National Environment Agency of Singapore(2023), Ministerio da Fazenda(2024), U.S. Treasury(2024), Wetterberg et al. (2024),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2025), European Coimmission(n.d.), IDXCarbon(n.d.), Japan Exchange Group(n.d.)

BANK OF KOREA

V. 한국형 VCM도입의 기대효과 및 주요 과제

- 한국형 VCM은 민간의 탄소감축 투자와 녹색·전환금융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할 수 있으나, 시장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정비가 병행될 필요

기대효과

① 탄소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까지 감축투자 참여 확대

-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대규모 배출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VCM은 **법적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발적인 감축실적을 크레딧으로 인증·거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
- 특히 탄소제거 등 신기술 기반 감축실적이 크레딧으로 인증·거래될 경우, **크레딧 판매수익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작용**하여 **투자비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감축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② 금융기관의 중개·투자 기능 확대

- 탄소크레딧 판매를 통해 **감축사업에 추가적인 수익원이 형성되면서 사업의 수익성 및 자금회수 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큰 국내 녹색·전환금융에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자금조달 기반을 다변화**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과제

공급·발행 단계	거래·등록 단계			수요·사용 단계
① 품질관리	② 가격평가	③ 크레딧 이력 관리	④ 중복계상 방지 체계	⑤ 사용·공시 기준
• 감축실적의 **산정·검증 기준과 시장에서 인정·거래할 크레딧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ICVCM 핵심원칙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	• 유형·품질 등이 유사한 크레딧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체결가격·거래량 등 거래정보를 축적하여 **가격평가의 기반을 마련**	• 크레딧의 **발행부터 소각까지 이력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등록기관과 거래소를 연계하여 거래·사용정보를 신속히 반영	• **크레딧과 국가 감축실적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파리협정 제6조·CORSIA 등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필요한 **승인·회계처리 기준을 정비**	• 기업의 **적절한 크레딧 사용기준과 감축성과 공시 방식을 마련**하고, **제3자 검증 및 ESG 공시와의 연계체계를 정비**

한국은행

감사합니다

BANK OF KOREA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